

데스크 시국

2020, 호남의 선택



홍행기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2024년까지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42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과 막바지 공천 작업이 한창이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등 야권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민생당' 등 호남에 기반을 둔 야권도 총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본선 경쟁이 예고돼 있다. 이미 20번이나 치러진 총선이지만, 이번 21대 총선은 대선을 한참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예전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우선, 19대 총선(2012. 4. 11)은 18대 대선(2012. 12. 19)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치러졌으며, 20대 총선(2016. 4. 13)도 19대 대선(2017. 3. 15)을 11개월 앞두고 치러졌다. 총선 때 구축된 여야 정치 지

형도가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하지만 20대 대선(2022. 3. 9)은 21대 총선(2020. 4. 15)이 끝난 뒤 23개월이 지나서야 치러진다. 총선과 대선 사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이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민의 '전략적 선택'을 가능케 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예상하는 전략적 선택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가능성 높은 선택은 "호남 정치의 복원과 진보 세력의 집권 연장, 그리고 호남 인재의 대권 도전을 굳히기 위해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에 올인한다"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의 함수 관계

이는 이번 총선을 '대선 전초전'으로 보는 집권 여당 민주당이 기대하는 시나리오긴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거론된다. 호남 선거구 28석을 민주당 후보들이 석권할 경우 향후 정국이 '호남 대비호남 프레임'으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으로서 내심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호남에선 지난 16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호남 제1당'이 약속

이라도 한 것처럼 25석씩을 차지했다. 20대 총선에서도 호남 제1당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전체 28석 중 23석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21대 총선 역시 호남 제1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세력이 호남 지역에서 조금이나마 교두보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호남의 또 다른 전략적 선택인 셈이다. 대선까지는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일단 민주당 이외의 세력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호남 정치의 외연을 먼저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의 통합체 '민생당'이 고대하는 시나리오다. '호남 정치와 민주당 집권 연장을 위해선 정국 구조가 호남 대 비호남으로 고착화하면 안 된다'는 기대 섞인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 주는 것처럼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광주·전남 지역구 압승이 현실화할 경우, 18개 지역구 중 최소 15개 지역구가 초선 현역으로 채워지게 되고, 이는 국회 내에서

호남정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다.

진보 세력 집권 가능할까

지금 정국은 그동안 분열을 거듭해 왔던 보수 세력이 미래통합당의 기치 아래 힘을 집결하는 모양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각종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에선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수의 텃밭에선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이번 4월 총선은 향후 대선에서 민주·진보 세력의 집권 여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호남은 주요 선거 때마다 필요한 전략적 선택을 구사함으로써 국내 정치 판도의 변화를 견인하고, 독자 세력의 집권을 견제하며,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의 전략적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폐칼럼

인구는 국가의 자산이자 경쟁력



한국한 전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184만 9861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3802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2586만 4816명(49.9%), 여자는 2598만 5045명(50.1%)이다. 이 중 50대 이하에서는 여자 인구가 많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인구가 많다. 전체 인구 수는 중국(14억 4000만 명), 인도(13억 8000만 명), 그리고 미국(3억 3000만 명)을 포함하여 세계 28위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0.92명(2019년)으로 OECD 회원국 중 1 미만이 유일한 국가다. 내수 경제를 이끌었던 생산 가능 인구(15~64세)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

로 가파르게 추락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추구했던 국가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제 경제 지위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앞선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1조 6295억 달러(12위), 1인당 GDP는 3만 1431달러(28위)로 나타났고 경제 성장률은 간신히 2.0%를 유지해 OECD 중상위권이다. 물론 최근 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7%에 이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경제 갈등 등, 그리고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 탓이지만 OECD의 '세계 경제 저성장의 고착화 위험 경고'를 감안하면 국제 상황이 비추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2%의 성장 중 주체별 성장 기여도는 민간 0.5%p, 정부 1.5%p로 정부가 성장의 75%를 담당하여 정부 역할이 압도적으로 컸다. GDP 규모가 전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은 민간의 기여도에 달려있기에 아쉬운 점도 크다. 가장 안타까

운 일은 우리 인구 증가 폭이 너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2014~2019년) 동안 인구 증가 폭 추이는 20만 1422명에서 작년 2만 3802명으로 점점 가파르게 줄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생산 가능 인구는 33만 6650명이나 줄었다. 이런 실태를 볼 때 인구 문제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기에 일 정 규모 정도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획기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계청 자료(2019년)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저출산 추세에 따라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7년 3929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증감을 결정하는 인구 성장률은 2000년 0.84%에서 2030년에는 -0.03%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쓴 예산은 35조 6000억 원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도 연간 출생아 수는 줄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43만 8420명(2015년)에서 30만 3000명(2019년)으로 줄었는

데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 '현금 지형 정책'으로 한계에 이르렀으며, 기대 수명 증가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를 지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부터 해외 인구 유입 등을 제외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 기대 수명 연장을 고려한다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육아·교육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등에 관한 총체적 사회적 합의와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 재해(855명·2019년), 교통 사고(3781명·2018년), 자살(1만 3670명·2018년 OECD 1위) 등 각종 사고·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인구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도 세심히 병행해야 한다. 한 나라의 인구 규모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력이며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기 고

코로나19와 흑사병의 귀환(歸還)



김순식 동신대 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 교수

1347년 시칠리아의 메시나항에 도착한 상선의 선원들이 전염병에 걸린 상태로 배에서 내렸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망했다. 후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질병인 흑사병이 유럽에 최초로 상륙했던 것이다. 이 전염병은 유럽 인구 3분의 1에 해당되는 3000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흑사병이라 불린 이 전염병은 유럽인들을 사회적 공황 상태로 내몰았다. 중세 유럽인들은 두려움을 대체할 심리적 출구로 '광기와 미신'을 찾았다. 흑사병의 창궐을 악마의 소행으로 여겼던 유럽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를 보속(補贖)할 가장 적절한 희생양이었다. 이 전부터 중세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세주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며,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황제에게 밀고했다는 이유로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흑사병에 대한 공포와 유대인

들에 대한 중세 기독교인들의 질서와 편견은 '마을의 샘물에 독약을 타거나, 흑사병을 퍼뜨린 유대인'이라는 혐오로 조작되었다. 그리고 인종주의로 변질되어 대략 1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고 만다. 공포로 무너진 대중 심리가 혐오와 인종주의적 학살로 확대됨으로써 실제 전염병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급격히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3000여 명의 사망자에 확진자도 8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확진자 4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8명이나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지역으로의 확산 속도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 68개국에서 최소한 9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향후 최소한 수개월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는 인간 질병의 40% 이상은 전염병이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인간과 공존하며 공통된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데다 해외 여행의 증가, 과학 기술 발전의 영향,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염병은 더 이상 그것이 발생한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이며, 오직 국제 사회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전염병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중국(인)과 아시아인을 문화적으로 불결하고 미개하며, 비도덕적인 사회'로 간주하는 언론 보도가 잦다. 과거 제국주의 시기에 유럽이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고,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를 부추겼던 '황화론'(黃禍論·Yellow Peril)과 같은 '코로나 인종주의'(Corona-Racism)가 되살아나 국제 사회의 연대를 해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이나 이란과 같은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논리로 지역 혐오를 조장하는 등 '내부 혐오'가 표출되고 있다. 예측 불허의 확산 상황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봉쇄와 같은 초기 대응,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용 등 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은 결과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험을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는 등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말'들은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폭력이다. 심지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이나 심판'이라는 일부 종교인들의

의 '말'에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위험에 직면한 지금에는 전염병이 가져온 생물학적 위험보다 혐오와 공포의 말들이 생산하는 심리적 고통에 더욱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더불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불순한 말들로부터의 거리 두기도 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반드시 극복된다. 때문에 현재의 위험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지금은 차분하게 정부의 조치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위험 상황에는 타자의 불행에 선한 연대로 동참해야 한다. 현재의 위험에 맞서므로 헌신하고 있는 보건 의료인들의 희생과 위험에 처한 대구 지역을 위해 자원하고 있는 '남만 닥터들'과 같은 수백 명의 보건 의료인들의 헌신을 보라. 눈물겹다. 그리고 환한 미소로 대구 확진자를 "광주로 보내라"는 달빛 동맹의 실천을 보라. 아름답다. 이러한 공동체적 연대는 서러운 광주의 정신을 끝내 희망과 평화의 가치로 승화해 낼 것이며, 나아가 살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증명할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마인 중세 흑사병의 공포에 광기와 미신으로 폭력의 흑역사를 기록한 중세 유럽인들의 과오는 오늘을 이해하는 거울이다.

社說

마스크 못 구한 취약계층 두 번 울린 탁상행정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급 물량이 탈락 줄을 서고도 못 사고 돌아서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다. 한때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이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할 예산을 확보하고도 전혀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시군구별로 추진키로 했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최근 전면 보류했다.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생활시설 거주자 등 24만 4000여 명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하려 했지만 수차례 입찰과 수의계약이 무산되면서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광주 서구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마스크 30만 장을 구매, 취약계층에 나눠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보건복지부 권고대로 조달청에 한 장당 800원에 입찰을 의뢰했지만 이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에 참여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구는 이에 입찰 구매를 포기하고 지난달 27일 한 장당 1680원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거품이 됐다. 정부가 전달 마스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기관과 판매처에 '지자체'를 포함시켰다가 하루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삭제, 구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광주·전남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마스크 구매에 나섰다가 실패해 저소득층 지원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과 공급자 위주의 엇박자 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몸조자 가누기 힘든 노약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마스크 구입 대열에 내몰리고 있다. 취약계층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역사회 감염 한시도 방심해선 안 된다

잠시 잠잠해진 듯싶었으나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주일째 확진자가 없었던 광주에서 그제 추가 확진자가 세 명이나 나오고 전남 지역도 동부권을 중심으로 3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의 광주·전남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난달 23일 9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지만 이날 한꺼번에 3명이 추가됐다. 특히 추가 발생자 중 두 명은 확진 판정이 내려진 당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교회 계단교회(백서로 73)에서 주일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전남 지역은 동부권에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3일간 하루 한 명씩 순천·여수·광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순천 지역 한 병원 간호사(여·

25), 29일에는 대구에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여수 분가로 내려온 남성(22) 그리고 지난 1일에는 광양에 사는 주부(36)가 확진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지역 의료계는 "이미 예견된 일로, 앞으로도 당분간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어 "광주시는 호남 의료거점도시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재정비를 비롯해 과도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의료 인력·장비·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의 조언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 시 신속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방역 당국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대형 교회 예배 중단 협조 등을 포함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알베르 카뮈의 장편소설 '페스트'는 1940년대 프랑스의 작은 도시 오랑이 배경이다. 인구 20만 명의 도시에 전염병 '페스트'가 발생하고, 외부와 철저히 봉쇄된 도시에서 시민들이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인간들의 이별과 상처, 좌절과 절망을 실감 나게 묘사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페스트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 의식이 싹트고, 이를 이겨 내는 과정은 더욱 감동적이다. 시민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대인 '보건대'의 활동을 통해 이 시대

(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국이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염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것은 개인의 역할이다.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 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다. 대로 단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히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병균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회적 거리 두기

의 행동이 감염병 추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자기 방역(셀프방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자제, 모임 제한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연대와 동참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만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권일·정치부 부장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곡(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